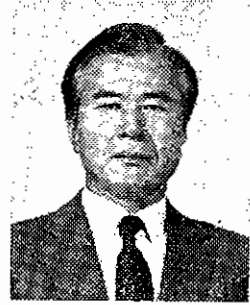


大學教育과 質的 發展



高麗大 總長 李 準 範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해방 후로부터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學生人口만 하더라도 해방되던 해에 7천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12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인구 1,000명당 30명이 되는 셈이고 이러한 비율은 여러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등교육의 이와 같은 成長은 국가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여 줄 뿐만 아니라 문명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국민의 자질을 갖추어 준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더우기 人間資本이 가장 큰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大學의 發展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성장이 오직 학생수의 증가나 학교수의 증가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문제가 된다. 건전한 고등교육의 발전은 質的 基盤을 토대로 한 量的 成長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킬 시점이 이르렀다고 본다.

대학의 질적 발전은 학문적 수월성을 전제로 한 敎育의 內質化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이 생각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 敎育課程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핵은 교육의 내용에 있다. 대학은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現代敎育의 眞髓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학과목들이 엄선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敎育方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급증하는 학생인구로 수업의 단위가 달라졌고, 교육 배체의 개선과 수업 기술의 개발로 교육 형태가 달라졌다. 대학교육에서도 새로운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敎育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대학과 교수 사이에서 고안되고 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敎育環境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충실한 교육과 학풍의 진작은 바람직한 교육 환경의 제공에서 이룩된다. 그러나 현실의 대학을 볼 때 급증하는 대학인구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환경 구비가 미흡함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충실한 교육을 이끌기에 합당한 교실의 구비, 연구 시설의 보완 및 교육 기재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 대학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 대학의 규모나 운영의 면에서 한국의 대학은 성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학 나름으로의 特性이 발휘되고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주어져야 하겠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부각되는 교육과정의 개선, 교육 방법의 쇄신, 교육 환경의 구비 등은 우수 교수 확보와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된다.

결국, 대학의 질적 성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財政的 確保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은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더우기 이 등록금도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과감한 개선책 없이는 현실 타개는 어렵다고 본다. 대학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登錄金制度의 개선, 産學協同을 통한 연구 분위기의 조성은 물론이요, 行政당국으로부터의 과감한 補助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私學에 대한 국고 보조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학 운영에 대한 自律性의 保障이다. 대학이 성년기를 맞이하였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民主社會가 허용하는 선의의 경쟁은 상호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확산케 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대학 운영에 대하여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개체 대학은 나름으로의 學風을 세울 수 있고 特性 있는 대학으로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국의 대학은 이제 성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양적 성장을 질적 발달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인 스스로는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운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丙質化의 基礎가 되는 대학 재정의 확보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의 부여를 위해 행정당국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政策轉換이 있어야 할 것이다. *